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국가목표와 안보정책은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국가목표는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기본적인 가치이며,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지향해야할 목표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둘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한다. 셋째,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을 본격 추진하여 '안정된 평화정착의 원년'으로 기록하는 것을 2000년 안보정책 목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을 흡수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위기대응능력과 체제를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태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경분리원칙 아래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다변화함으로써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하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포함한 상호위협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북한이 국제적 규범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제2절 대북정책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분단과 대치 상황하에 있어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북한과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으로 국방정책 수립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 화해 ·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북 3대 원칙과 6대 추진기조를 천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은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및 화해 · 협력의 추진'을 말한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한 · 미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한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셋째, '화해 ·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남북 쌍방이 파급효과가 큰 경제분야부터 교류를 활성화시켜 남북간의 대결관계를 화해 · 협력관계로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남북간의 화해 · 협력은 상호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대북정책의 6대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 ·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말한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화해협력정책'의 추진과 북한이 이를 신뢰하기 시작함으로써 55년 분단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전환점이 되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구공사 개시 그리고 장관급회담 등이 계속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측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였고, '6 · 15남북공동선언'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현재 단계에서 우리의 국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비롯한 군사적 실체가 아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군의 임무 · 역할, 국방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발전 기본개념을 정하였다. 이러한 국방발전 기본개념에 따라 국방정책기조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중 · 장기적 국방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안정과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함은 우리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유지 노력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누락

내용누락

다.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6 · 15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 · 협력이 가속화됨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군사분야에 한치의 허점도 없을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전쟁방지를 위한 안보, 화해협력을 위한 안보'를 직시하여 우리 군은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남북 군사직통전화 개설, 대규모 훈련 상호 참관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도모할 것이다.

라. 한 · 미 동맹관계 발전 및 대주변국 안보협력 강화

한 · 미 동맹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경제 발전 그리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한 · 미 동맹관계를 기본 틀로 하여 다각적 ·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다자안보협력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협력기구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안보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마.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21세기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 및 비군사분야를 망라한 제반 안보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국민의 군대' 육성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유사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제2의 전력으로 활용하는 등 민 · 군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총력 국가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은 국가발전에 스스로 동참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 · 테러 · 마약 등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적 위기나 재난시에도 즉각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고 대민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군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할 것이다.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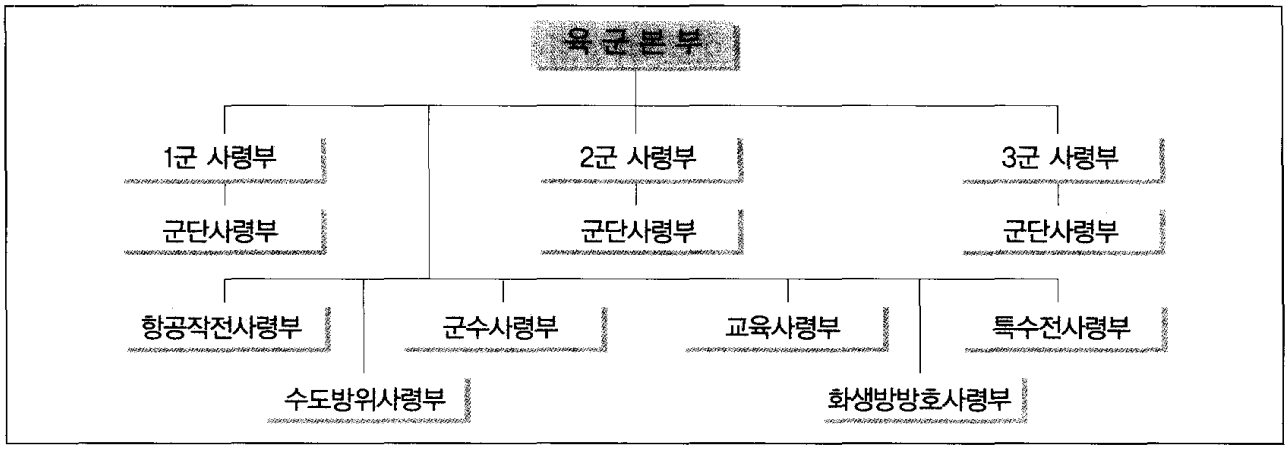
제1절 각군별 보유전력

1. 육군전력

육군은 국가 보위의 주력으로서 평시에는 해·공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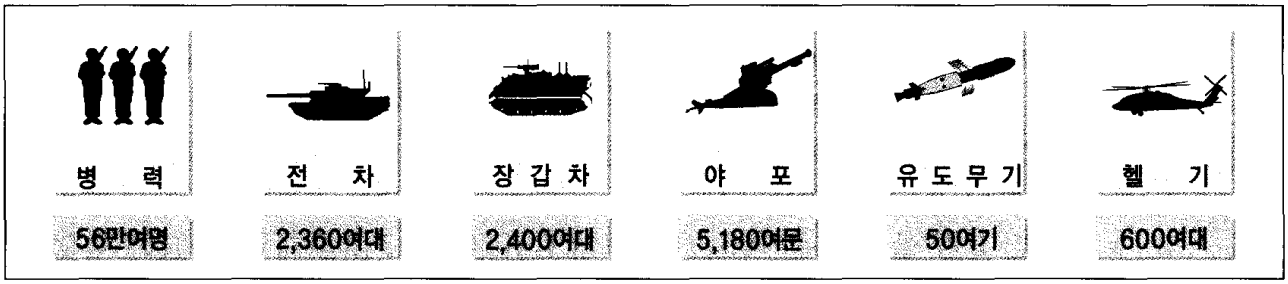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1개 군단, 49개 사단, 19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표 2-2] 한국의 육군 구성



육군은 주요전력으로 56만여 명의 병력, 전차 2,360여대, 야포 5,180여문, 장갑차 2,4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보유 내역은 도표와 같다.

[도표 2-3] 한국 육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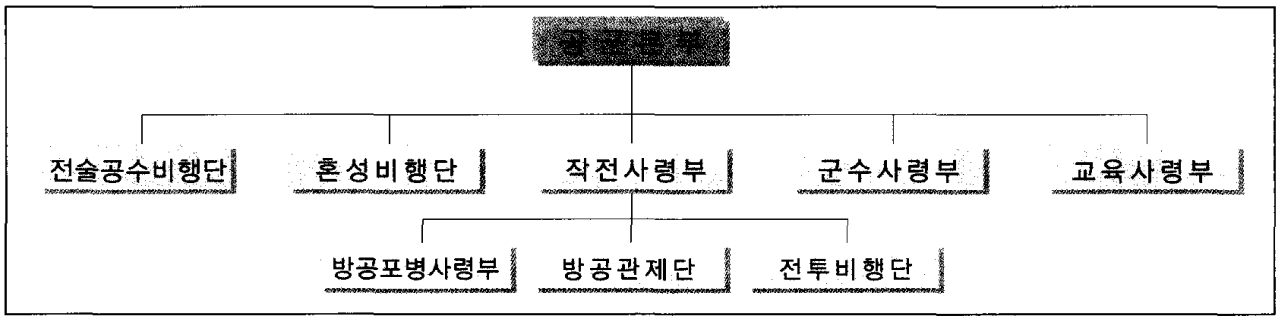


※ 야포 : 다련장포 포함, 유도무기 : ATACMS 포함.

내용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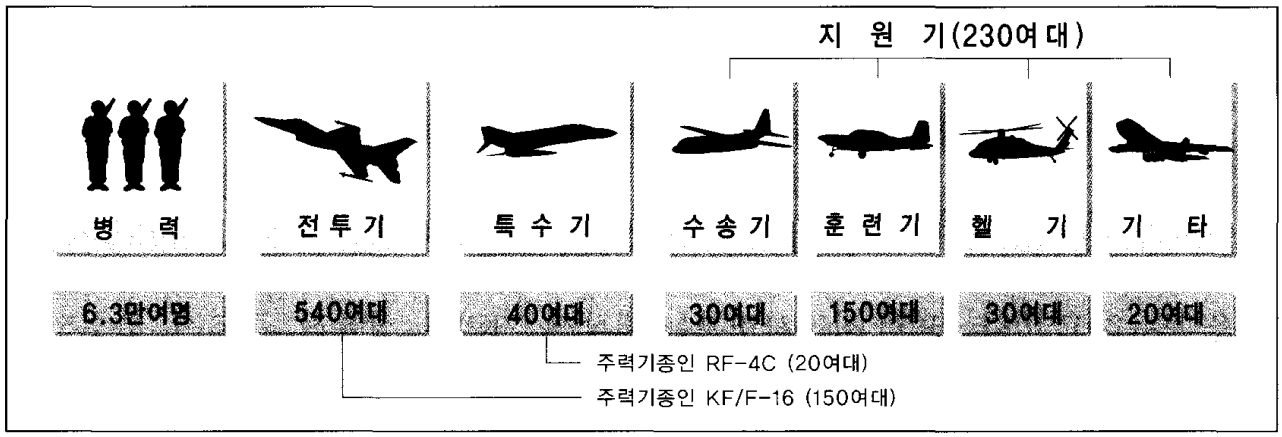
내용누락

[도표 2-6] 한국의 공군 구성



공군은 주요전력으로 약 6만 3천여 명의 병력과 F-16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도표 2-7] 한국 공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항공작전은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의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현재 공군은 정밀폭격 및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상 및 해상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공 · 지 · 해 합동작전체제와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4. 예비전력

예비군은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제정되었고,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그해 4월 1일부로 창설되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각자의 임무수행 능력을 유지하여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대 증 · 창설 및 병력손실에 대한 보충요원으로서 현역과 똑같이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현역복무 등 병역을 마친 후 8년차까지 복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약 30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시 동원되어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의 개인 화기 및 장비 · 탄약과 전차를 비롯한 각종 화포 및 공용화기는 부대가 증 · 창설되어 전투투입을 준비하게 될 지역에 평시부터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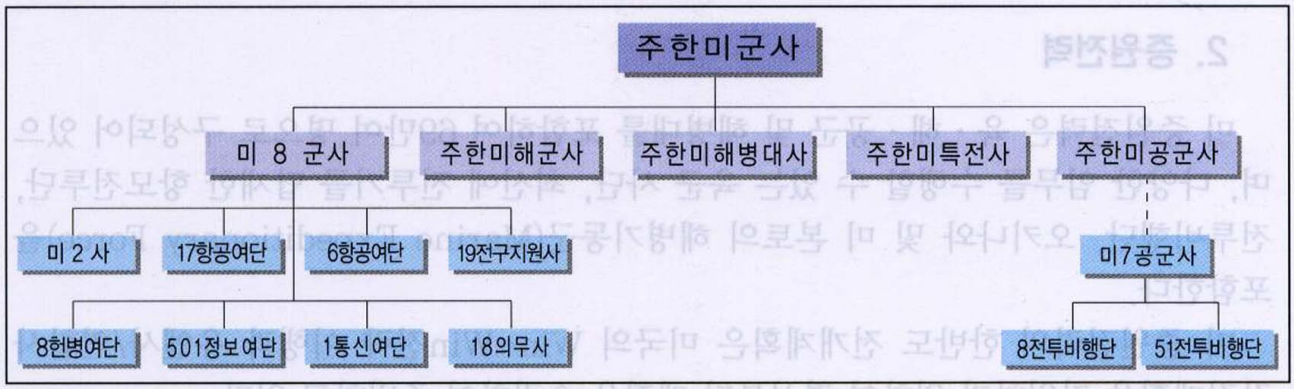
제2절 동맹국의 군사력과 증원전력

1.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 · 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한국에 주둔한 이래, 한 · 미 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예하 사령부로는 미8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및 주한 미특수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 제7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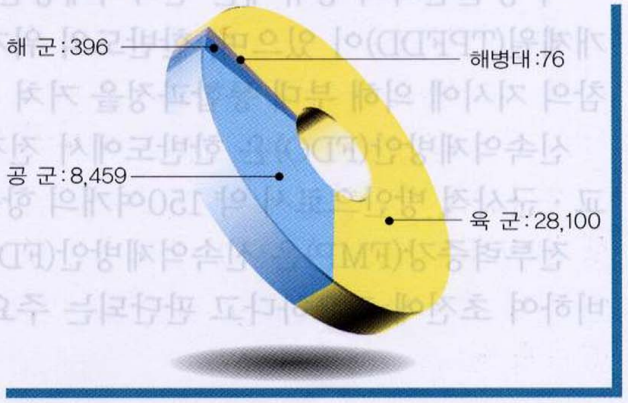
[도표 2-8] 주한 미군사 조직



현재 주한미군의 인가된 총 병력은 오른쪽 도표와 같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은 140여대의 신형 M1전차와 170여대의 브래들리(Bradley)장갑차를 비롯하여 30여문의 155미리 자주곡사포, 30여문의 다련장 로켓,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각종 지대공, 지대지 유도탄과 우수한 전투능력

[도표 2-9] 병력 현황(인가) (단위:명)



을 갖춘 70여대의 AH-64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 미 공군은 70여대의 F-16 등 최신예 전투기와 20여대의 A-10 대전차공격기, U-2기를 비롯한 1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최신예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주한 미 공군은 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전천후 공격 및 공중 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 7함대 및 7공군이 증원될 경우 주한미공군 전력은 질적·양적으로 현저히 증강될 것이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

주한 미해군사 및 해병대사, 특수전사는 평시에는 사령부를 구성하는 소수 인원과 장비만으로 기간 편성되어 있으나, 전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미 태평양사령부 전력이 투입되어 월등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2. 증원전력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69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군 사단,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전투단, 전투비행단, 오키나와 및 미 본토의 해병기동군(Marine Expeditionary Force)을 포함한다.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미국의 Win-Win전략 이행과 유엔사/연합사 작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다.

미 증원전력의 종류에는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및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이 있으며,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시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해 부대 통합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신속억제방안(FDO)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시에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FMP)은 신속억제방안(FDO) 등을 통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

치로 주요전력으로는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속억제방안(FDO)과 전투력증강(FMP) 전력을 포함하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상의 주요 전력은 전쟁발발시 전개하도록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전력들로서, 그 종류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In-Place)과, 상황발생시 시차별로 전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전력(Pre-Planned), 그리고 요청시 추가로 전개되는 전력(On-Call)으로 구성되어 있다.

● 증원전력 현황

미국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2개의 주요전구전쟁(2MTW : 중동 및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침략행위를 저지/격퇴한다는 Win-Win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반도 증원전력도 이러한 전략개념하에 한반도 전구에서 유사시 승리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획한 전력이다.

한반도 증원전력의 주축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내의 전력은 1990년대 초반에는 48만여 명, 1990년대 중반이후 63만여 명을 계획하였다가, 최근에는 약 69만여 명의 병력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1,600여대의 전개계획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병력의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개가 계획된 전력 내에는 개전초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방에 밀집한 적 포병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 · 방공 · 적지 타격을 위한 공중전력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한 · 미군은 1994년부터 한 · 미 연합사 주관으로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면서 전개 수행체계 및 수송수단의 운용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제3절 우리 군의 대비태세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 방송시 비방을 자제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훈련수준의 증가와 전력증강 및 전투준비태세 보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북한군의 군사적 능력은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과 불안정상태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확고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군사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1. 조기경보체제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우리 군은 한 · 미 연합 감시자산을 운용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전선지역에서는 장병들의 육안감시와 레이다, 열상장비, 전자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북한지상군을 감시하고 있고, 해상에서는 해상감시 레이다와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등 자동화된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해상활동을 실시간에 확인하고 있다. 공중에서는 중앙방공통제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영공 감시활동을 통해 북한의 공중활동을 추적 감시함과 아울러, 필요시 미국 군사 첩보위성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밀 감시활동에 의해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 · 미 연합 위기관리 및 협조체제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한 · 미 연합 위기관리체제의 발전은 1994년에는 관련약정을, 1995년에는 세부시행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1998년에는 연합 위기관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상호 동일한 관점에서 일관된 위기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조치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연 4회의 한 · 미 연합 위기조치 정기연습 및 수시훈련을 통해 상호 첩보교환과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여 위기 발생시 한 · 미 연합에 의한 체계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합참은 위기조치예규를 근간으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위기조치 요원으로 사전 지정 · 편성하여 평시 불시 소집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위기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위하여 고속지령대와 지휘소 자동화체계 운용을 정착시킴은 물론, 유사시 합참을 비롯한 전작전사가 위기조치 체제를 즉각 가동시킬 수 있도록 긴급 전파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2. 평시 군사 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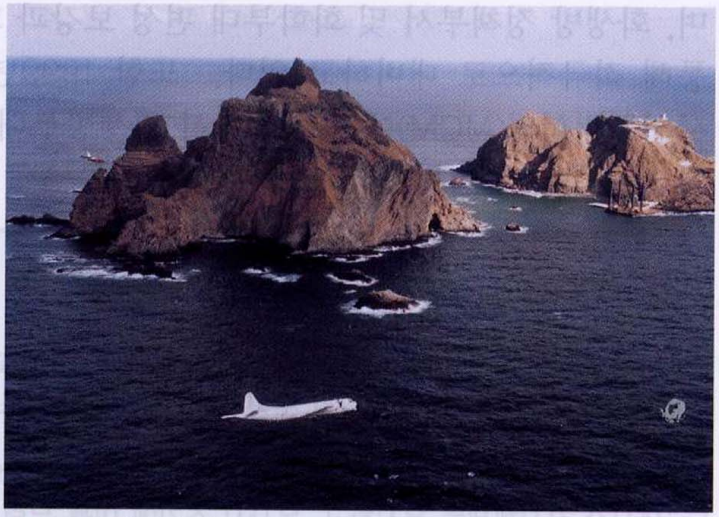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육 · 해 · 공군의 합동작전 태세를 확립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250여km의 휴전선에 철책을 설치하고 감시초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안선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 울릉도 · 독도를 포함하는 동 · 서 · 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함정, 잠수함 및 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 공중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공군기로 주 · 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각종 레이다 및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 활동을

감시 ·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서는 민 · 관 · 군 통합방위체제를 확립하여 북한군의 침투/테러 등 각종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로부터 군부대, 경찰, 해경, 예비군, 민방위대, 어업무선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요소들이 통합된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독도 근해 초계 활동

또한, 제21차 한 · 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는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 · 미 군사위원회(MC) 상설회의 운영을 활성화시켰으며, 2000년 3월 한 · 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조기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군사 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3. 전시 군사 대비태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 1,500Km 수준의 미사일과 다량의 화학무기, 포병 및 기계화부대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전 초기의 전투결과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사전 분쇄하고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 통수 및 국방위기 대응체제를 공고히 유지한 가운데 각종 협의체의 활성화와 계획 발전, 연합 연습 및 합동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협의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한 · 미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회의(MCM)를 매년 1회씩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수시로 상설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사안들을 협의하는 등 한 · 미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계획발전 측면에서는 한 · 미 연합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작계5027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계5027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연합 및 합동연습과 훈련으로 을지포커스 렌즈(UFL)연습,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독수리(FE)연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방호하기 위해 1998년도에 미사일 및 화생전 위협에 대비한 종합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

내용누락

내용누락

셋째,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화 · 전 양면전략 전술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상대가 강할 때에는 평화를 지향하다가 약할 때에는 즉각 무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킨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3가지 핵심 논리를 기조로 삼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완벽할 때만이 남북 공동선언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적개념을 포함한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4절 전투임무 위주 훈련강화

1. 연합 · 합동 연습 및 훈련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및 연합 전비태세 강화를 위해 한 · 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작전계획 하에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연합 전시증원(RSOI)연습, 독수리(FE)연습, 팀스피리트(TS)연습 등 다양한 한 · 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UFL 연습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국가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종합지휘소연습이다. 1954년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포커스렌즈연습'과 1968년 1 · 21사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을 1976년도에 통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는 전쟁초기 정부 위기관리 및 한 · 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와 함께 작전단계별 상황을 상정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나.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은 한 · 미 연합사 주관 하에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 Foal Eagle 연습

다. 독수리(FE)연습

독수리 연습(FE : Foal Eagle)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1999년의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증원전력, 연습지역내 행정관서와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후방지역에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여단 쌍방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연습기간 중 부산/울산 광역시와 경남에서는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고, 2부 연습간에는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과 한·미 해병대, 해·공군이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다.

라. 환태평양훈련(RIMPAC)

환태평양훈련(RIMPAC)은 1971년부터 미3함대사 주관하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하여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에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및 해상분쟁 발생시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안

▲ RIMPAC 훈련시 하푼 미사일 발사장면 (2000. 7)

국간의 연합작전 능력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 해군은 1990년도에 최초로 이 훈련에 참가하여 2000년에는 6회째 참가하였다.

마. 팀스피리트 연습(TS)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 · 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 · 미 연합 야외기동 연습이다.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간의 정기적인 연합연습으로 순수한 방어위주의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에게도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관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연습은 한 · 미 동맹관계의 확인과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 및 군사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연습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

바. 압록강 연습

압록강연습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실시하는 한국군 자체지휘소 연습으로, 전시를 대비하여 전쟁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지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와 작전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5월에 실시한다

압록강연습시 합참과 작전사의 지휘부는 연습실시단으로 연습에 참가하고 기타 부대 및 기관은 대응반과 대행반을 구성하여 자대 지휘소 및 전투모의본부에서 워게임 모델에 의해 연습을 실시한다.

합참은 압록강연습을 통해 작전지휘 및 참모활동 절차와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제대별 작전계획을 시행하여 전시 전투력 복원절차와 전시 지원소요의 산출 및 지원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1999년 연습시부터는 지휘소 자동화체계(C4I)를 연동하여 운용함으로써 연습성과를 향상시켰다.

사.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해안축선과 내륙축선에서 육 · 해 · 공군 합동으로 작계 시행 위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대부대 합동훈련이다. 2000년 호국훈련은 동해안 및 중부내륙 축선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이 훈련을 통해 기능별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여 보완하였고, 국

▲ 호국훈련

내용누락

▲ 육군의 화생방 방호 훈련

관에게 과감히 위임하여 자율과 창의성 있는 책임제 훈련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 권역별로 통합훈련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이용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과학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을 설치중에 있다.

나. 해군

해군은 대잠전, 대함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 및 특수전 등 각종 해군 성분작전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계함급 이상의 함정은 대잠전과 대공전 및 전자전 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상전투함정은 적의 대규모 해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전 위주의 입체적 종합기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공방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 함정은 상륙돌격 및 상륙기습훈련을 통해 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뢰전 함정은 적의 기뢰부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해능력과 기뢰부설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해안정찰, 기습타격 및 생환훈련을 통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잠수함부대는 항만봉쇄와 대잠전 및 수상세력 감시와 어뢰발사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항공부대는 함정과 협동으로 해상 초계작전 및 대잠전훈련과 함께 레이더 탐지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적에 대해 대함 미사일 공격을 유도하는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1993년부터 연 1회 해군의 전 가용전력과 육 · 공군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종합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다중위협 상황하에서 복합전 개념에 의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적의 고속상륙세력을 이용한 특수작전부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수상 · 수중 · 항공전력의 입체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연합 해상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해군과의 연

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미 연합훈련도 내실화하여 한·미 해군간 연합작전체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주변국가와의 군사훈련 및 훈련 참관단 교환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해군사관학교 생도 순항훈련과 같이 우리 군함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와 외국 군함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각각 연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의 향상은 물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

해병대는 상륙전력의 일부로서 연합 및 단독 상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육·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공군

공군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을 실제 전장과 전투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대공 훈련으로는 침투하는 적기를 가능한 원거리에서 탐지·식별·요격·격파시킬 수 있도록 주·야간 요격훈련, 공중 전투 기동, 공대공 사격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공대지 훈련으로는 적의 전략적 시설과 주요 군사력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저고도 침투 후 전술사격 및 야간·전천후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공군(방공포사)의 혹한 극복 훈련

또한 전자전, 탐색구조, 전술공수, 정찰훈련 등을 병행 실시하고 육·해군의 작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근접항공 지원훈련과 한·미 연합 방공, 연합 공격편대군훈련 등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제3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2000. 3)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과제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5조)에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상태 구축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라고 합의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4자회담을 추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는바,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관련국인 미 · 중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화해협력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 을 통해 북한경제 회복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책 추구, 이산가족 문제해결,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등의 4대 과제의 실천의지를 대내 · 외에 표방 함으로써,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 · 15남북공동선언' 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측은 '6 · 15남북공동선언' 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및 장관급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간 각종 교류 ·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정상이 합의한 '6 · 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사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정전체제 유지와 판문점 장성급회담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정전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정전체제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지되는 체제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 이후 군정위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군정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 이후에도 북한 · 중국측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키는 등 정전체제 가동을 거부하면서 1995년 3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전체제의 틀 내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창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 2월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옴으로써 1998년 6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1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정전협정 이행문제를 다루는 회담으로 유엔사측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대표들은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담은 그 동안 발생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위기관리 채널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 · 북간의 실무협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유엔사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 한 판문점에서 일체의 접촉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정전협정 규정과 기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인도해 오던

한국전 미군 유해를 미국이 직접 인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대화 및 접촉상대에서 배제함으로써 유엔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통하여 미 · 북 평화협정 체결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전협정' 규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군사정전 위원회와 그 틀 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성급회담,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2.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정전협정 제60항에서는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는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쌍방은 1953년 10월 정치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1954년 제네바에서 6 · 25전쟁 관련 20개국이 모여 회담을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이후 정전체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다가 1974년부터는 미 · 북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자 북한은 1994년 4월에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미 · 북 평화협정의 체결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 · 미 정상은 1996년 4월 16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 · 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공동 제의하게 되었는바, 4자회담은 6 · 25전쟁의 주당사자인 남북한이 합의하고 관련국인 미 · 중이 함께 지지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평화구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 · 미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1997년초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해 11월 제3차 예비회담에서 4자회담 의제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라는 단일 의제로 할 것과 제1차 회담을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2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국 ·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즉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 · 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우선적으로 논

의되고 협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에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긴장완화분과위원회'와 '평화체제구축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1999년 1월에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는 이들 2개 분과위원회를 처음으로 가동시켜 '분과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각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에 개최된 제5차 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4자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제6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 · 북 평화협정 체결을 4자회담의 실질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확신 아래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보장하는 방식의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

가. 남북정상회담

정부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화해협력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화해 ·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교류 · 협력을 증진하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 3월 9일에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북한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개최' 등의 4대 실천과제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2000. 6)

우리의 일관된 '화해협력정책'과 '베를린 선언'으로 북한은 점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되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을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 의견 접근을 본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이 있었고 둘째, 탈냉전의 시대조류와 한반도 평화분위기 성숙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조정하고 대남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셋째, 남과 북이 상호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상호간의 입장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려는 생산적인 대화를 모색하였고 넷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다섯째,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의 최초의 만남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구현하고,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및 통일문제 협의의 계기가 되었다. 또 이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과 호혜적인 남북협력 관계 증진에 합의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합의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능하게 한 전기가 되었다.

나.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1, 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간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남북 군사 당국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바, 남과 북의 군이 과거의 불신과 대결로부터 이 땅에 확실한 평화를 보장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6·15남북공동선언'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간 '화해·협력·평화' 분야의 균형된 진전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북한측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9월 1일 평양에서 개최

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한측은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9월 14일 우리측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9월25일에서 26일 사이에 홍콩에서 개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도 함께 논의하자고 답신하였다. 이에 북한 측은 9월 17일 회담장소를 제주도로 할 것을 수정·제의하였으며, 9월 18일 우리측은 북측제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함으로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9월 24일 오후 대표 및 지원인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북한측 군사대표단이 분단이래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 남으로 내려왔으며, 회담은 25일과 26일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하였으며, 양측은 회담결과를 '공동보도문' 으로 공식화하였다. 회담 이후 북측 대표단은 26일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번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성과 및 의의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군 당국 책임자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회담을 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북한이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대미 협상만을 주장해 왔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한 것 그 자체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하나의 전기라 할 수 있다.

▲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0. 9)

둘째, 양측 국방장관이 '6·15남북공동선언' 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이다. 쌍방은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

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보다 확실히 보장됨으로써 그 동안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위주로 이루어지던 남북관계가 군사차원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북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점에 양측 국방장관이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외에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북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군인사 교류, 대규모 부대 이동 및 훈련통보·참관, 군사정보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조치 이행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간 당면 현안인 경의선 철도 복원 및 개성-문산간 도로 개설은 공사와 관련된 군사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안전보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다섯째,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정구간의 개방이 불가피한바, 남북국방장관이 이와 관련된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법적, 실질적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그 조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여섯째, 쌍방이 2차 회담을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군사당국간 대화가 사실상 정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향후 계속될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협의·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개선은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라는 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을 중심으로 병행(two track)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교류·협력의 주요한 통로라면, 남북국방장관회담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는 주된 창구가 될 것이다.

향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남북 군사당국자간 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 기공식

남북은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개성-문산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는바, 국방부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뢰가 매설된 임진강 북단지역의 9.2㎞에 대한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각각 추진위원회를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부추진위원회'는 공사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 통제와 정부 부처 및 대외기관과의 협조, 유엔사와 대북협의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육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군추진위원회'는 공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육군은 지뢰제거 및 공사부대에 대한 경계와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공사 임무를 1군단에 부여하는 한편, 육군건설단을 창설하여 철도 및 도로 노반공사 임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는 바, 현재 총 8개대대 2,700여명이 본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국방부는 본 사업이 '6 · 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당국간 첫 협력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 된다는 인식하에 군의 전역량을 집중하여 최단기간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뢰제거 작전 및 공사 추진간 안전사고 방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북측과의 충돌사태를 방지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철도 · 도로 개설이 완료될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깊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첫째, 도로 건설에 따른 군사적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국방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둘째, 철도 및 도로가 전술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봉쇄 및 거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셋째, 철도와 도로가 고속접근로로 이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기, 공격헬기, 포병, 보병 및 대전차화기를 통합하여 차단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4.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은 전쟁포로를 교환하였으나 북한측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상당수가 자발적 의사확인에 의한 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되었다. 유엔사는 196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이들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국군포로인 조창호 소위의 극적인 귀환에 이어 1997년에 1명,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3명, 그리고 2000년에 8명 등 국군포로가 연이어 귀환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국군포로들에 대해 국가의 본분과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 국군포로 모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북한측에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북한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실종자로 관리해오던 24,000여명을 전사처리함으로써 유족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국군포로 귀환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였다.

셋째, 1999년 1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유관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전국 9개소에 민원 신고소를 설치하여 한국전쟁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국내 연고자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이를 기꺼이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국 또는 잠재 적국과의 정치 · 군사적 협의를 통해 군사적 불안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국가안보 전략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신뢰구축 및 안보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적대국의 군사위협 동기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낮은 수준에서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여 상호 공격능력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둔다.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안정적 군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를 포함한 남북간 군비통제에 호응할 경우 능동적으로 협의,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1. 남북한의 입장

북한은 그 동안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비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주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 · 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군비통제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 군비축소, 후 신뢰구축' 의 원칙하에, 단기간 내의 급격한 병력감축에 치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보다는 정치 ·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을, 단계적인 타결보다는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등 군비통제 추진의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 군비통제를 모색해왔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의 군비통제정책 기조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의 기조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호 체제의 인정과 불가침 및 내정 불간섭의 이행을 통하여 남북 당국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각 분야 교류 · 협력의 증진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적 차원에

서는 상호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군사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기습공격 능력을 제한·제거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시키고 한반도 공동안보체제의 구축을 이룩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군비통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남북 군비통제는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해결의 원칙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남북한간의 직접대화와 쌍무협상을 통하여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둘째,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남북간에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과정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이미 합의되어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기본합의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등 한반도에 절실히 필요한 군비통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남북 군비통제 추진의 방법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기초한 세부 이행사항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협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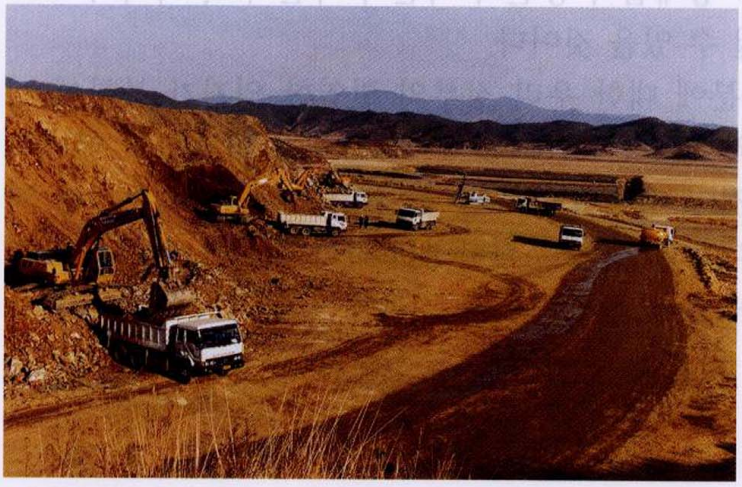
셋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융통성 있게 배합 추진한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여건이 상당 수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군비통제 추진에 대한 남북한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추진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 군비통제 조치를 유연하게 제기·협의할 예정이다.

즉,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군인사교류,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 및 참관, 군사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 등 기초적 신뢰구축조치 외에도 무기 및 병력

의 동결을 통한 군비경쟁 중단 조치의 강구 및 시범적 군축 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 북한 경수로사업 부지 정지 공사

북한의 핵, 화생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안보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조속히 군비통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관련 핵시설 해체, 폐연료봉 봉인 후 해외 이전 등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대가로 1,000메가와트(MW) 경수로 2기 제공, 경수로 제1기 완공 시까지 연간 중유 50만톤 제공, 남북대화 재개와 경제제재 완화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EU 등이 참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고,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1997년 8월 북한의 신포에서 부지공사가 착공된 후 지금까지 경수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6억 달러에 달하는 총사업비의 분담률에 대해서도 한·미·일간에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경수로 제1기 건설완료시까지 대체연료로 지원되는 중유도 계속 북측에 인도되고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연료봉 8,000여 개에 대한 봉인작업도 2000년 4월에 종료한 상태이다.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담당하는 한국은 앞으로도 북한이 기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수로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명시된 대로 핵개발의 동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과거 핵 문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및 사찰의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남북 대화의 진전에 따라 1992년 1월 20일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지침 준수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줄 때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와 이를 통한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개선, 국제경제기구 가입 등 경제협력 증진의 여건이 마련되고, 나아가 스스로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북한에 전달되었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 통제체제를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판단이다. 앞으로 우리는 화해·협력 및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참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운용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제1절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의 냉전기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보장이라는 공통 전략목표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없는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조성된 안정적인 안보환경하에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양국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초로 하여 화해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완벽한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9월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양국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유지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국방장관회담 (2000. 3)

한·미 양국의 안보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해 커다란 기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한·미 양국은 1882년 5월 '조·미 평화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처음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888년 미국이 4명의 통역장교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양국간 군사관계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9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진주하

면서 본격화되었으며,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양국의 안보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의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이듬해인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략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본 틀로서,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발전

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양국은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을 계기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68년 5월 워싱턴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모두 32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명칭을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바꾸면서 외교부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안보차원의 회의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32차 SCM 단독회담 (2000. 9)

이 회의는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5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분과위원회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 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며,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군사위원회'의 본회의는 '한·

미 안보협의회의'에 앞서 개최되며 그 결과는 '안보협의회의'에 보고된다. 군사위원회의 상설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관련된 군사 현안문제를 협의한다.

'한·미 안보협의회'는 양국 장관의 정기적 회담이라는 상징적 의의가 중요시되어 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한·미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구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로서, 이는 1977년 7월 26일 제10차 SCM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TOR)'과 1978년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하달한 '전략지시 1호'에 근거를 두고 같은 해 11월에 창설되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미 연합사의 창설로 한국전쟁 당시부터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12월 1일부로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부대에 행사했던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평시에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CODA)에 대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유지는 종전대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와 연합군사령부는 상호 지원 및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우방국들의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 및 한국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중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1991년에 체결된 제1차 방위비협정(SOFA 특별협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중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1/3을 분담토록 한 바 있다. 이어서 한·미 양국은 1996~1998년 3년간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후속 SOFA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995년 지원액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액은 3.99억불에 이르렀으나

1997년 말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3.1억불로 조정되었다. 이어서 한 · 미 양국은 1999년도 이후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정을 1999년 2월 25일에 체결하였다. 동협정에 따르면 1999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 2,575억원과 미화 1억 4,120만 달러로서 미화로 환산하면 약 3억 3,300만 달러이다. 아울러 2000년과 2001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되도록 하여 우리의 부담능력을 위주로 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999년 합의액 대비 9.78% 증액되어 약 3억 9,100만 달러이며, 2001년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중에 있다.

4. 제반 한 · 미 현안의 해결 추진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기본적인 활동은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지의 설치와 훈련으로 인해 주변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 · 미 연합방위체제의 일원으로서 한국 방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주한미군의 기지 운영과 훈련으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형태의 국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 미 동맹의 관리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한 · 미 동맹과 국민 모두를 위한 국익차원의 상생(相生)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 미 양국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주한미군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의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SOFA 개정 문제는 타국에 비해 불리한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개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 미 양국의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매향리 미공군 폭격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0년 8월부터는 기총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불발탄 처리를 제한하는 등 획기적인 소음 경감 및 안전 제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한 · 미 양측은 SOFA 합동위원회 등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 미 양국은 지난 50년간 한 · 미 양국의 공동안보를 위해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안보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에 따른 상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2절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교류 및 협력

1. 대(對) 주변국 군사외교 발전

우리 군사외교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특히, 일본·중국·러시아와의 군사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이러한 군사외교활동은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폭 넓게 발전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이를 통해 조성된 우호적인 외교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주변 4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한·미 동맹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일본·중국·러시아와 균형된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가. 대 일본 관계

한·일 양국은 1966년 주일 한국 무관부 개설과 1967년 주한 일본 무관부 개설이후 군사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990년 이전에는 군 인사교류 및 군사학교 학생 교환방문 등 주로 인적분야의 교류를 실시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군사교류를 다양화하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장관회담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양국의 외무·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가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국방정책실무회의, 정보본부와 각 군간의 정보교류회의 및 방공실무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간, 해군과 일본 해자대간, 공군과 일본 공자대간에 긴급연락채널이 설치되었으며, 합참·통막간 부장급 회의와 해군 대 해군회의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군사적 대화 채널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1999년 8월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및 항공기가 참가하여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순수 평화목적의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2000년 5월 동경에서 실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지역안보에 긴요하며, 양국간 군사교류를 증진시켜

▲ 국방장관 일본 방문 (2000. 5)

나가는 것은 한 · 일간 군사적 신뢰증진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막의장간 상호 교환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한 · 일 공동 해상 수색 · 구조훈련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0년 3월에 일본 방위대학교에 처음으로 우리 공사생도 1명을 위탁교육 파견한 데 이어, 2001년부터 육 · 해사 생도 각 1명을 추가 파견 교육시키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우호증진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 대 중국 관계

한 · 중 관계는 1992년 수교후 8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21세기를 향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한 · 중 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1993년에 주중 한국 무관부, 1994년에 주한 중국무관부가 개설된 후 꾸준히 발전되어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군 체육교류는 1992년부터 군인 체육선수단의 상호교류를 시작하여 1999년에는 상무 축구 및 농구 선수단이 방중하였고, 중국 핸드볼과 해군 조정선수단이 방한하였다. '한 · 중 국방학술회의'는 1999년 북경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지역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또한, 군 교육기관간 교류로는 1999년에 최초로 중국군 낙양 외국어학원에 3명의 장교를 파견교육 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군 교육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군사 교육기관 교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조성태 국방장관은 6 · 25전쟁 이후 우리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군사관계를 달성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양국 군간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현저히 기여하였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8월에는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한국군 4성 장군급의 공식 방문으로서 양국 군 고위급 인사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1999년부터 한·중 군사관계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균형 발전과 '21세기 한·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중국 국방부장 방한 (2000. 1)

다. 대 러시아 관계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1990년 9월 국교 수교 및 1991년 양국 무관부 개설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급 인사 상호교류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5월 한·러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5회의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군 총장이 러시아를, 러시아에서는 국방장관 및 각 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군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양국 휴가장병들이 연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한·러 군사관계는 주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4년부터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즉, 1994년 '해상 사고방지 협정', 1996년 '군사협력 양해각서', 1997년 '군사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과 1998년 '휴가장병 상호 방문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현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해상사고 방지협정 이행협의회'와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5월에는 '한 · 러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한 · 러 국방장관 회담 (2000. 5)

또한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해군 함정간 순수 평화적 목적의 공동 수색 ·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강원도 주최 '2000 세계 평화 팡파르'에 러시아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인적교류, 제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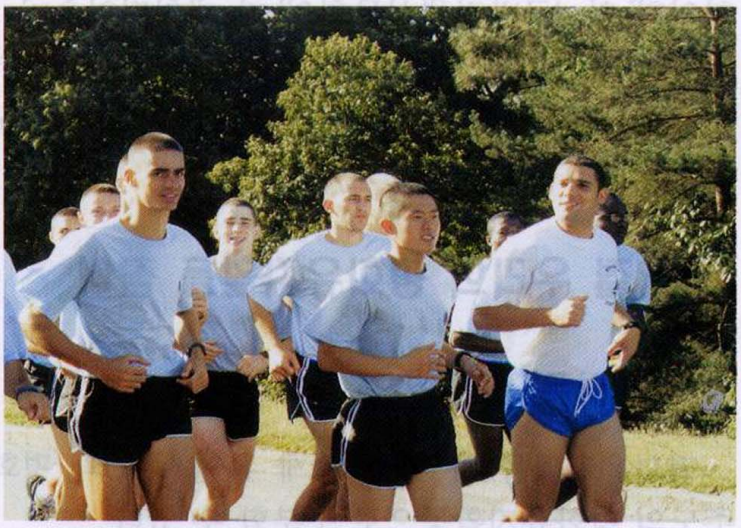
우리 군은 군사 교류 협력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교류 협력의 내용과 범위도 확대시켜오고 있다. 각국과의 군사 교류 협력은 무관부 운용,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 교류 협력회의, 군사교육 · 학술교류, 함정상호방문,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군사협정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1999년 10월 베트남 국방차관의 방한에 이어, 2000년 4월에는 우리 국방차관이 베트남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양국 군간 교류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군수 · 방산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함정 교환방문, 군사교육 교류 등의 협력을 통하여 군사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이후, 1999년 11월에는 몽골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유럽지역은 주로 영국 ·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군 고위급 인사교류, '국방정책 실무회의' 및 '군수 · 방산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9년 1월에

는 프랑스 국방장관이 방한하였으며, 영국 · 프랑스 · 독일과는 2000년 2월에 '군수 · 방산공동위원회'를, 3월에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하여 방산분야 협력사업 및 양국 국방정책 등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하였다. 또한 1968년이래 독일 육사에 우리 사관생도를 위탁교육 파견한데 이어 2000년부터는 프랑스 육사에도 우리 육사생도 1명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 프랑스 육사의 우리 육사생도

1999년 11월 우리 국방장관이 최초로 터키를 방문하였고 2000년 6월 터키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국전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방산협력 및 교육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동지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에 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1999년 9월에는 쿠웨이트 국방장관이, 2000년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방한하여 상호 안보 관심사와 양국 군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양주 지역과는 한국전 참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군사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는 1996년부터 외교 · 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석하는 정치 · 군사협의회, 1997년부터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호주 국방총장이, 5월에는 호주 국방장관이 각각 방한하여 상호 안보관심사 및 양국군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0년 2월에는 양국 해군간 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어 해군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 · 호 해군회의 (2000. 2)

주한 뉴질랜드 무관부는 1998년 4월 개설되었다. 1999년 5월에는 뉴질랜드 육군총장이 방한하였고, 6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제1차 '한 · 뉴질랜드 정치 · 군사

협의회'와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7월에는 우리 국방차관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상호 안보관심사 및 양국 군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1998년 11월에는 호주, 뉴질랜드와 각각 '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제3절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1. 평화유지활동 개관

평화유지활동(PKO)은 크게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과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예루살렘 정전감시단(UNTSO)을 시작으로 지난 50여년간 118개국 80여만 명이 53개 PKO 임무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 8월말 현재 코소보, 동티모르 등 15개 지역에서 87개국 37,400여명의 군 및 경찰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립국가연합(CI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의 기구들이 지역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타지키스탄, 시에라리온, 코소보, 동티모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평화유지활동에는 군, 민간경찰, 선거감시요원, 유엔 및 국제기구, 각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기관이 참가하며, 군 요원은 통상 평화유지군(PKF)과 군 감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평화유지군은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내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군 감시단은 비무장으로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감시하며 순찰, 조사,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 활동 경비는 유엔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의 경우는 대부분의 비용을 해당 파견국이 부담하게 된다.

▲ 동티모르의 상록수부대

2.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1992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도표 2-10] 한국의 PKO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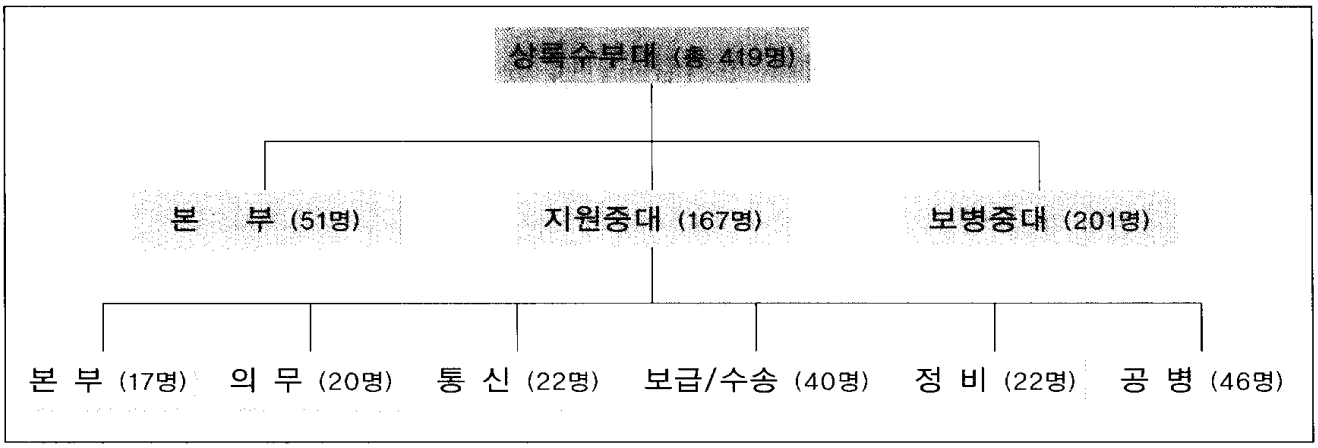
	서 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20명	1994. 9~	6개월	322명 1- 4진 : 42명 5- 6진 : 20명 7진 : 14명 8-12진 : 20명
	인 · 파	군 옵서버 9명	1994.11~	1년	47명
	그루지아	군 옵서버 3명	1994.10~	〃	27명
	동티모르	보병대대 419명	1999.10~	6개월	836명
		사령부 참모 12명	2000. 1~	1년	12명
		동부여단본부 13명	2000. 2~	6개월	13명

이듬해인 1993년 우리 군은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이래, 6개 지역에 2,36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 왔으며, 2000년 8월 현재 4개 분쟁지역에서 476명이 평화의 사도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1999년 8월 30일 '동티므로 자치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권자의 78.5%가 독립을 지지하였으나, 독립을 반대하는 민병대가 심각한 유혈폭력사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9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창설을 승인하였고, 유엔 사무총장과 다국적군 주도국인 호주가 우리 군의 파병을 공식 요청해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전개에 동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지 치안유지활동을 위해 보병(201명)을 주축으로 수송 · 보급, 통신, 의무

[도표 2-11] 상록수 부대 편성



등 지원요원을 포함하여 총 419명으로 파견부대를 편성하여 '상록수부대'로 명명하였으며, 상록수부대는 1999년 10월 22일 동티모르 로스팔로스지역에 전개하여 치안유지 업무를 개시하였다.

● 동티모르 파병 의의 및 성과

상록수부대는 1999년 9월 28일 국회의 파병승인을 얻은 직후, 호주에서 현지적응훈련을 마치고 동년 10월 22일 현지로 전개되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2000년 2월 1일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전환되었다.

상록수부대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기동순찰, 주요시설 경계, 상주작전 등 치안유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진료, 대민지원, 구호품 제공 등 구호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상록수부대를 '다국적군의 왕'으로 칭송하면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군사령부 참모장을 비롯한 25명의 참모요원들도 성실한 근무자세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다.

우리 군이 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유엔평화유지군에 상록수부대를 파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전쟁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국가로서 이제는 우리가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의료 · 공병 등 지원부대 위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우리군 최초로 보병부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파병과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활동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료지원단은 1994년 9월 제1진을 파견한 이래, 2000년 8월 현재 제12진 20명이 활동 중이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유엔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내 유일한 단위부대로 유엔요원에 대한 1단계 의료지원, 능력초과 환자의 상급 병원시설로 후송, 24시간 응급환자 조치, 현지 사령부에 대한 방역과 식품 및 수질 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파견요원은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28,000여명의 유엔요원에게 성실한 진료를 제공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다.

다. 군옵서버(Military Observer) 활동

2000년 8월 현재 우리 군은 인도 · 파키스탄 유엔정전감시단(UNMOGIP) 및 그루지아 유엔정전감시단(UNOMIG)에 각각 9명과 3명의 영관급 장교를 군옵서버로 파

견하고 있다. 이들 2개 지역에 파견된 우리 군 장교들은 현지사령부의 통제하에 정전협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가. 평화유지활동(PKO) 상비체제 참여

평화유지활동 상비체제는 유엔 회원국이 평시 자국의 특정부대와 장비 등을 평화유지활동용으로 사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엔의 요청시 합의된 반응시간 내에 신속히 공여하는 제도이다. 1995년에는 불과 35개국이 상비체제에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나, 2000년 3월 현재에는 88개국으로 증가되었다. 한국이 1995년 3월 유엔에 통보한 상비체제 요원은 약 800명 정도이나, 향후 국제사회의 안보상황과 UN PKO정책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표 2-12] 한국의 PKO 상비체제 참여규모

보병 1개 대대	540명	[illegible]	11명
[illegible]	130명	[illegible]	10~15명
[illegible]	70~80명	군 옵서버	36명

나. PKO 교육체계 발전

우리 군은 1993년부터 북유럽의 유엔교육대(UNTC), 폴란드, 아일랜드 등 해외 PKO교육기관에 장교를 파견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해왔으며, 1995년부터는 캐나다 피어슨 평화유지교육원(PPC)에 장교 및 관련 공무원을 연수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합동참모대학을 군옵서버 및 참모요원 등 간부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1998년 5월 PKO학처를 출범시켰으며, 특전사 교육단을 PKO부대단위 교육 전담기관으로 육성하여 보병 · 공병 등 파견요원의 교육을 내실있게 할

[도표 2-13] PKO 해외교육파견 현황

북구국 UNTC	군옵서버(3주)	1993~1997	9
스 웨 덴	참모과정(3주)	1993~1997	5
노르웨이	군수과정(3주)	1993~1997	3
폴 란 드	군옵서버(3주)	1996	1
캐 나 다	단기과정(2~3주)	1995~1999	32
아일랜드	옵서버/참모(3주)	1997	1

계획이다.

다. 유엔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우리 군은 1995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소령급 장교 2명을 유엔 PKO사무국에 파견한 바 있으며, 1999년 12월 유엔 한국 대표부에 군사담당관을, 2000년 1월에는 PKO사무국의 기획장교를 각각 파견하여 유엔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4절 국제 안보협력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1. 지역 및 다자 안보협력대화 참여

탈냉전 후, 아·태 및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부분적인 군비축소를 통한 교육, 복지 등 사회개발비 확충노력 요구와 경제위주 정책추진 등으로 군 병력의 일부 감축 등 군축 및 군비통제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 지역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지역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 체제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인종, 종교, 자원, 환경 문제 등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이한 안보인식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한 지역 군비통제의 합의점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한 지역 군비통제 노력이 역내 안정 및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공존, 한반도 군비통제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대화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대화로는 정부차원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민간차원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1994년 7월 출범하여 현재 2000년 7월에 가입한 북한을 포함 23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다자안보협력대화체로서 외무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ARF-SOM)를 비롯하여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